

일일 국제 기후·에너지 동향

신재생에너지

◆ 일본, 건설 비용 급등으로 해상풍력 개발 난항(주일본대사관)

- 일본 현지언론 보도(닛케이,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고물가 및 엔저 등으로 급등한 건설비용이 일본 해상풍력 발전 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미쓰비시상사가 2.6(목) 발표한 2024년 4~12월기 연결 결산에 따르면 일본 국내 3개 해역* 프로젝트 기준 522억엔 손실을 계상했으며, 결산 기자회견에서 동社 나가니시 사장은 “3년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세계적 인플레이션·엔저·지정학적 리스크 따른 변화는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돈다.”라고 언급함.

* 아키타현 노시로, 아키타현 유리혼조, 치바현 조시

- 2028.9월 이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해상 풍력 사업도 추가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가니시 사장은 ‘재평가를 통해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는 재공표하겠다’라고 언급
- 해상풍력은 설비에 수만 개에 부품이 사용되고 사업비도 수천억엔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비의 과반수를 조달이나 건설 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고물가 영향이 표면화되기 쉬운 분야임.
- 영국 BP社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통합을 결정한 일본 발전 대기업 JERA에 의하면 풍차의 조달 비용은 과거 4년간 1.5~1.8배로 상승
-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동 분야 철수가 잇따르고 있으며, 해상풍력 최대기업의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社는 2024년 10~12월 기준 미국 사업에서 121억 덴마크 크로네(약 2,600억엔)의 손실을 계상했으며 영국 BP社나 노르웨이의 석유 대기업 에퀴노르社도 2023년에 거액 손실 계상
- 일본도 현재 보험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례로 2024.12월에 국가가 결과를 공표한 제3차 사업자 공모에서는 사전 조사를 실시한 기업의 약 절반이 입찰을 보류했으며, 오스테드 등 외국계 기업도 일본 내 사업 축소 움직임 관찰
- 전기사업연합회 하야시 회장(중부전력 사장)은 ‘국내외에서 해상풍력 발전은 비즈니스로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공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
-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철수를 막기 위해 입찰 때에 비해 자재 가격 등이 오를 경우, 매진 가격에 일부 전가할 수 있는 제도를 2025년도 이후 마련할 방침으로, 경제산업성은 “(해상풍력) 사업 실현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함.
- 단 해당 제도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며, 일본은 특히 얕은 바다가 적어 해상풍력을 대량으로 도입하려면 앞바다에 풍차를 띄우는 부유식 도입이 필수적이나 이는 착상식 해상풍력 대비 건설비용이 2배인바, 국민 부담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성공 예상치의 제시가 필수적. 끝.